

별첨. 주요 대선후보 방송·통신·소비자정책 평가서

평가 개요

1. 일정 : 정책질의서 발송(2017.03.23.) 및 회신(2017.04.11.)
 2. 대상 : 각 정당 대선후보(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3. 평가방식 : 분야별로 각 단체의 전문가와 실무자가 서술식으로 평가함
-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질의에 답변하지 않음

1. 소비자권리 확대

내 용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소비자정책 독립기구 설치	기타	기타	찬성	찬성	입 장 없 음
집단소송제 도입	기타	찬성	찬성	찬성	
징벌배상법 도입	기타	반대	찬성	찬성	
징벌배상 상한 3배 제한	기타	기타	반대	반대	
소비자무과실 책임도입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소비자 입증책임 전환	찬성	찬성	찬성	반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 판매, 비용절감을 위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장치 조작 등 기업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 제도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를 금전배상에 한정하다보니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통제나 처벌이 미흡하다. 또한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현행 제도에서는 소비자 자신이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19대 대선 주요 후보들은 기업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소비자정책 독립기구 설치,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 소비자입증책임 전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무너진 소비자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소비자정책 독립기구와 징벌배상 상한을 3배로 제한하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소비자 입증책임 전환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소비자권리 보장에 긍정적인 답변으로 했다.

이에 비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소비자정책 독립기구 설치에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집단소송제 및 징벌배상제 도입에는 찬성하나 점진적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 징벌배상 한도를 두지 않은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하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1) 소비자정책 독립기구 설치

-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후보 모두 소비자정책의 중요성에 공감하였으나, 소비자정책 독립기구 설치에 대한 입장은 달리함. 심상정, 유승민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정책 업무를 이관해, 정부부처 간 정책조정을 총괄하는 독립기구 설치에 동의했지만,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음
- 문재인 후보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은 여야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변했고, 안철수 후보는 소비자보호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금융·제조물·의료분야 등 소비자 분쟁 해결조정을 위한 전문성 있는 별도의 부서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함

2) 집단소송제 도입

- 모든 후보가 현행 소송구조로는 소액다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는 데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는 유승민,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찬성했으나, 문재인 후보는 소비자 분야에 우선 도입하고 다른 분야로의 확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임
- 문재인 후보는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사법개혁 위원회가 장기 과제로 도입을 주장한 때로부터도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가슴기살균제참사와 같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기업의 불법행위가 적지 않고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졌음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신중하여 제도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스러움

- 유승민 후보는 대체로 전체 분야로 확장하여 기업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징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가장 잘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음

3) 징벌배상제 도입

- 심상정, 유승민 후보는 징벌배상제의 중요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어, 징벌배상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액도 3배로 제한하는 것에 반대함
- 반면 안철수 후보는 일반법 형태의 징벌배상제 도입이 아니라, 개별법에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기업부담 등을 고려해 상한도 3배로 제한해야 한다고 답변함으로써 제도도입에 반대해 온 기업과 별반 다르지 않는 입장을 보임. 문재인 후보도 징벌배상제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적용대상과 배상상한에 대해 피해자구제와 기업의 부담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애매한 입장을 표명함
- 문재인, 안철수 후보 모두 징벌배상제 도입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거나, 기업 눈치를 보는 소극적 모습을 보임

4) 소비자 입증책임 전환

-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후보는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 도입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함. 반면 제조물 결함에 대한 소비자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서는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찬성했지만, 유승민 후보는 반대함
- 유승민 후보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무과실책임을 폭 넓게 적용하는 것이 최근 법리 추세라면서도, 소비자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서는 기업에게 너무 과중한 부담이 된다면 반대함
- 현대 사회는 고도의 기술집약적 제품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들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과학적·기술적으로 문제점을 증명하기는 매우 힘들고, 관련 전문 지식 및 정보의 부재로 인해 사실관계와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기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임을 고려할 때 모든 후보가 무과실책임에 동의하고, 유승민 후보를 제외하고 소비자 입증책임을 전환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임

5)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후보 모두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동의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변형 시행된 의무고발제가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것에도 공통된 의견을 나타냈음.
- 문재인 후보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불공정거래 피해자나 단체에 고발권을 부여하고, 유승민 후보는 피해자라면 누구든 고발권 행사가 합당하다고 답변함.
- 모든 후보가 전속고발권 폐지에 동의했지만, 전속고발권 폐지 후 공정위는 어떤 역할을 보완적으로 해나가야 하는지 등에 대한 언급 등이 없어 전속고발권 폐지의 구체적 실행 계획이나 구체적 준비는 부족해 보임

※ 소비자권리 보장을 위한 후보별 정책

- 문재인 후보는 제2의 가슴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물 등 소비자피해 영역에 집단소송제를 확대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점검 제도화, 등록·평가관리체계 구축, 어린이용품 성분등록제 및 안심마크제도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추가공약으로 밝힘
- 안철수 후보는 제조물·공정거래·금융·환경 분야를 포괄하는 집단소송제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소비자피해에 대한 입증책임경감 등 핵심적 입법을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함
- 심상정 후보는 공정거래법 상의 위법행위에 대해 개별법의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일반집단소송제, 소비자피해구제명령제, 사인 금지청구제 밝힘
- 유승민 후보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 도입을 제시함

2. 공영방송 정상화

내 용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공영방송 이사회 여야 이사추천 비율조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입 장 없 음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찬성	찬성	찬성	반대	
이사회 재적 ⅔ 이상의 찬성 의결 특별다수제 도입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공영방송 사장 선정의 자율성 보장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공개 등 투명성 강화	찬성	기타	찬성	기타	
언론탄압 진상조사 및 해직자문제 해결	찬성	기타	찬성	찬성	

현재 공영방송의 이사 및 경영진 선임방식은 대통령과 여당에게 과도하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고 있다. 편향적인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내부적으로 정부 비판 프로그램을 통제하고, 이에 저항하는 언론인들을 탄압해 그 결과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어 왔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후보 모두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이사회 여야 이사추천 비율조정,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이사회 재적 ⅔ 이상의 찬성 의결 특별다수제 도입, 공영방송 사장 선정의 자율성 보장,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공개 등 투명성 강화, 언론탄압 진상조사 및 해직자 문제 해결 등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공감했다.

다만 유승민 의원은 편성위원회 구성을 새롭게 하기 보단 제대로 수행하게 하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를 찾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회의 및 자료 공개에 대한 경영상 민감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문재인 후보는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의제를 나열하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아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다. 안철수 후보는 대부분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방송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해 보였다. 유승민 후보는 공영방송 정상화에 찬성하고 있으나 그 외에 별다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미디어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정책을 포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방송정책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디어정책의 근본철학을 ‘미디어 국민주권’으로 제시한 것은 시대정신에 잘 부합한다.

1)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정부여당 위주의 편향된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유승민 후보는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방송관련 협회, 단체, 학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가 일정 정도 이사로 등재되도록 하여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다른 세 후보에 비해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내놓음
-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공영방송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찬성한 반면, 유승민 후보는 반대함. 유승민 후보는 “현행 편성규약만 잘 지켜도 자율성 침해는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규약을 강화 또는 편성위를 새롭게 구성하기보다 규약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내 개선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힘
- 방송사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취재 및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대해 유승민 후보만 반대의견을 나타냄. 현재의 편성위원회 규약이 왜 잘 안 지켜지고 있는지, 이로 인한 취재 및 제작 자율성 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 다른 후보자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유승민 후보는 현재의 제도를 잘 지켜나가자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내리지 못하고 있음.
-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된 △공영방송 이사회 여야 추천 비율 조정, △사장선출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이사회 재적 ⅔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에 네 후보 모두 찬성함

2) 공영방송 이사회 투명성 강화

-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후보 모두 공영방송 이사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회의 및 자료 공개에 대해 원론적으로 공감함. 다만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이사회 임기 만료 시 모든 자료의 일괄 공개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냄.
- 안철수 후보는 경영상 민감한 정보의 경우 “이사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일정기간 예외기간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함. 유승민 후보 역시 “경영 전략차원의 자료에 한해 일괄 공개를 제한할 필

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힘

3) 공영방송 장악 진상규명 및 해직자문제 해결

-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안철수 후보는 해직 언론인 문제 해결에는 찬성하지만 언론장악 청문회 실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함
- 문재인 후보는 지난 3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하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해직언론인 문제해결에 관해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표명한 바 있음. 이번 답변에서도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함. 다만 다른 후보와 달리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지는 점은 보완이 필요함.
- 안철수 후보는 “청문회는 대상기관, 증인, 방식, 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애매 모호한 답변을 내놓음. 이는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별다른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후보라면 찬반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국민에게 평가받을 필요가 있음
- 심상정 후보는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 직속으로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를 설치하여 △언론자유 침해사건 진상규명, △해직언론인 및 표현의 자유 침해 피해자 보상과 명예회복, △방송 공정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힘
- 유승민 후보는 “체계적,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여야가 추천한 공영방송 쟁점위원회(또는 언론 쟁점 조사위원회)를 구성, 문제점이 발견되면 청문회를 실시”하겠다는 상세한 방안을 제시함. 이는 합리적 방안에 해당하나 그간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여야(추천 인사)가 정치적 공방만 벌이며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고려할 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 제시가 필요함

※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후보별 정책

- 문재인 후보는 언론장악방지법 개정, 통합방송법 제정, 지상파 민영방송의 소유구조·지배구조 개선, 지상파 지역방송 위상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제시함
- 안철수 후보는 방송장악방지 4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 심상정 후보는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 설치, 방송미디어를 포괄하는 독립행정위원회 설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제시함
- 유승민 후보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고품질의 보편적 시청권리 강화정신을 기본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힘

3. 시청자 권리 보장

내 용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시청자위원회 독립성 강화	찬성	찬성	찬성	기타	입장 없음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지상파 직접 수신율 제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지상파 다채널 방송 전면 허용	찬성	찬성	찬성	반대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권한을 방송사업자에게 부여함으로써 독립성이 저해되다 보니, 사장 또는 경영진이 마음대로 시청자위원을 위촉하고 있어 시청자위원회가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12년 디지털 전환 완료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방송 직접 수신율은 10% 이하에 머물고 있고,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지상파 다채널 방송은 유료방송 사업자의 반발과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하여 전면적인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시청자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청자위원회 독립성 강화,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상파 직접 수신율 제고, 지상파 다채널 방송 전면 허용에 대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는 모든 후보가 찬성해 누가 당선 되더라도 반드시 이행하여 유료방송 시청자의 권리가 향상되길 기대한다.

유승민 후보는 시청자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에 동의하면서도 “다원화된 위촉권한이 자칫 또 다른 세력에 의한 공영방송 종속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함. 지상파 다채널 방송 허용에 대해서는 수신료 부담으로 시청자 의견수렴과 합의가 필요하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1) 시청자위원회 강화와 유료방송 권리보장

-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후보 모두 유료방송의 공공성, 공적책무 강화를 위해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찬성함. 문재인 후보는 통합방송법 제정 단계에서 유료방송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하였고, 심상정 후보는 공영방송과 같이 유료방송의 시청자위원회도 실질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함
- 시청자위원회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위촉권한 다원화에 모든 후보자들이 동의함. 심상정 후보는 시청자위원회 사무국 설치를 통해 시청자위원회가 공영방송 내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 유승민 후보는 위촉권한 다원화에는 원칙적 찬성 입장을 보였으나 다원화된 위촉권한이 또 다른 세력에 대한 공영방송이 종속 문제점을 지적함.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 제시는 없음.

2) 지상파 수신율 제고 및 다채널 서비스 실시

-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모두 지상파 직접수신율 제고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고, 지상파 다채널 방송 전면 실시에 대해서는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찬성, 유승민 후보는 반대함
- 문재인 후보는 △소규모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을 포함한 개선사업 실시, △공시청설비 훼손 시 처벌 강화, △ 공청망 개선사업에 과감한 예산투입, △홍보 강화 및 실내 안테나 배포 확대 등의 매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 심상정 후보는 지상파 UHD방송 도입에 맞춰 안테나 내장 TV 출시 의무화를 핵심공약으로 발표함. 유승민 후보는 “시청자들이 손쉽게 요청을 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을 약속함. 안철수 후보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않음.
- 찬성 의견의 심상정 후보와 반대 의견의 유승민 후보는 다채널 서비스를 위한 지상파의 자원 마련 부분을 지적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지상파 중 재정 여건이 가장 열악한 EBS가 다채널 서비스 시험방송을 2년 넘게 해오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다채널 서비스에 대한 자원 부분은 KBS 등이 다채널 서비스 1개 채널을 유지하는데 예산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밝힐 필요성이 있음

※ 시청자 권리 보장을 위한 후보별 정책

- 문재인 후보는 시청자위원회 노사합의 구성, 지상파방송 직접 수신율 제고 및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도입, 수신료위원회 설치 적극 검토를 제시함
- 심상정 후보는 유료방송의 지역별 시청자위원회 구성 의무화, 시청자위원회 권한 강화, 방송사 노사 동수 추천으로 시청자위원 선임, 통합적 미디어교육 지원 체계 구축 및 시청자의 방송 참여 확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등을 제시함
- 유승민 후보는 시청자위원회의 권리강화, 지상파의 채널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함

4. 통신이용자 권리 보호

내 용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폐지	찬성	기타	찬성	찬성	입 장 없 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시 법원영장주의 도입	기타	찬성	찬성	기타	
수사기관의 기지국 수사 제한	찬성	찬성	찬성	기타	
압수수색 시 집행참여권과 이의제기권 보장	찬성	찬성	찬성	기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정보 뿐만 아니라, 유해 및 건전성의 기준으로 인터넷 상의 콘텐츠를 폭넓게 심의하고 있으며, 사법부의 판단도 없이 행정기구가 자의적으로 인터넷 상의 게시물을 삭제, 차단하는 것은 국가의 검열로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수사상 필요한 경우’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경우, 통화내역은 물론 특히 위치정보의 제공에 남용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이다.

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경우 이용자 통신비밀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에 대부분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가 패킷 감청, 기지국 수사 금지 등 과도한 통신 수사를 제한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무슨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조차 개선을 권고한, 통신자료 취

득에 있어서 영장주의 도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유승민 후보 역시 원론적인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도,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취득이나 이메일 압수수색 등과 관련하여 사실상 현행보다 통신비밀 권리를 후퇴시킬 수 있는 입장을 가진 것이 우려스럽다.

1)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후보 모두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와 자율심의로의 전환에 찬성하였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폐지는 정부조직 개편과도 관련되는 만큼, 새 정부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 공약이 반영되어야 함. 다만 안철수 후보는 내용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폐지에 찬성하고 있지만 ‘기타’로 응답함
-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 명령권 폐지에 찬성함. 유승민 후보는 명예훼손죄나 (가칭)가짜뉴스방지법을 제정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불법 게시물에 대한 사법처리는 이미 현재도 가능하고, 질의의 요점은 법원의 판단이 없는 행정기관(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명령권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것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모호함.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는 가짜뉴스의 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패러디나 비판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문재인, 심상정, 유승민 후보는 방심위의 통신 심의 폐지에 찬성함. 안철수 후보의 경우 ‘기타’ 응답을 하였으나, 내용적으로는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를 폐지하고, 자율규제로의 전환에 찬성하고 있음. 다만,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강력한 사후규제’가 불법 게시물에 대한 법원의 결정 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함

2) 통신 비밀보호 강화

- 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경우 이용자 통신비밀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에 대부분 찬성함
- 그러나 문재인 후보가 패킷 감청, 기지국 수사 금지 등 과도한 통신수사를 제한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무슨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조차 개선을 권고한, 통신자료 취득에 있어서 영장주의 도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의문임
- 유승민 후보는 원론적인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도,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취득이나 이메일 압수수색 등과 관련하여 사실상 현행보다 통신비밀 권리를 후퇴시킬 수 있는 입장을 가진 것이 우려스러움

- 기지국 수사와 같은 수사기법 제한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찬성함. 다만, 유승민 후보는 심대한 범죄 행위의 경우에는 법원에의 신고만으로 수사 가능하도록 하자는 입장인데,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경우 이미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현재보다 후퇴한 입장임. 그러나 특정 가입자와의 통신에 관련된 내용만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소위 저인망식으로 이루어지는 '기지국 수사'의 제한에 동의한다는 점은 긍정적임.
- 압수수색 절차의 엄격한 통제 및 정보주체의 참여권 보장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찬성함. 유승민 후보도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했지만,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에 신고만으로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압수수색은 현재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현재보다 통신비밀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입장으로 우려됨

5.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내 용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통신원가 공개 및 통신요금 인가절차 투명성 확대	찬성	찬성	찬성	반대	입 장 없 음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찬성	찬성	찬성	반대	
제조사와 통신사 보조금 분리공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위약금 상한제 도입	기타	찬성	찬성	기타	

이동통신서비스는 우리 국민 모두가 사용할 뿐만 아니라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생활필수품이다. 가계통신비는 가계 전체 지출의 5.5%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서비스 사용자 중 75.3%가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하여, 월 지출에서 통신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규제기관은 시장경쟁질서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통신원가 공개 및 통신요금 인가 절차 투명성 확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에 대해 찬성했다. 다만 문재인 후보는 위약금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안철수, 심상정 후보와 달리 검토해 봐야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유승민 후보는 분리공시를 제외하고, 사업자간 자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원가공개 반대와 요금인가제 폐지를 명확히 했다. 기본료 폐지는 이동통신사의 적자 우려와 신규 투자비용 마련을 위해 반대했고, 위약금 상한제를 시행하되 금액은 정부의 개입 없이 역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 통신원가 공개 및 통신요금 인가절차 투명성 확대

-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원가 자료 공개와 인가절차 투명성 확대에 찬성했음.
- 문재인 후보는 통신비 산정을 투명화하고, 요금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기 위한 (가칭)통신요금검증위원회 설치를 이미 공약화 했고, 심상정 후보는 이용자단체와 학계가 참여하는 통신비심의위원회 구성을 약속했음.
- 유승민 후보는 사업자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를 새로운 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유주의 경제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며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그러나 통신 산업은 시장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고, 시장 경쟁이 저조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이해 부족이 우려되고, 통신의 공공성을 부정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2) 기본료 폐지

-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에 찬성했음.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이동통신사의 적자 우려와 신규 투자비 마련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힘
- 문재인 후보는 19대 국회에서 기본료 폐지를 공약으로 채택했고, 심상정 후보는 통신요금 인하 대상을 기본료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3) 분리공시제 도입

-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후보 모두 제조사의 단말기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 약정 보조금에 대한 분리공시에 찬성함

- 문재인 후보는 고가 단말기의 가격 투명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6년 총선 공약으로 이미 분리공시제 도입을 강조했음. 심상정 후보는 분리공시 외에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금지, 지원금 상한제 폐지, 선택약정할인 확대 등의 정책을 제안했음. 유승민 후보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공개는 영업비밀이 아니라 바람직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의 밀착된 구조를 바꿔야한다는 의견을 표시했음

4) 위약금 상한제 도입

-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과도한 이동통신 위약금을 규제하기 위해 위약금 상한제 도입에 찬성함
- 반면 문재인 후보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유승민 후보는 위약금상한제를 시행하되 금액은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임

※ 가계통신비 부담완화에 대한 후보별 정책

- 문재인 후보는 기본요금 폐지,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조기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주파수경매 때 통신비 인하 노력, 농산어촌 등 취약지역 ‘슈퍼 와이파이’ 설치, 모든 공공시설 공공와이파이 의무설치 및 지속적인 확대를 제시함
- 안철수 후보는 2G·3G 가입자 기본료 폐지 유도, 주파수 경매 수익 및 전파 사용료 징수 제도 개선,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위약금 상한제 신설, 선택요금제 할인율 30%으로 확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등 단통법 개선,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제4이동통신 설립 추진과 알뜰폰 활성화를 지원, 공공 무료 와이파이 및 망중립성·제로레이팅 활성화를 제시함
- 심상정 후보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고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 주파수 경매, 전파사용료 등의 개선으로 요금 인하, 제4이동통신 도입으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시함
- 유승민 후보는 알뜰폰 가입자 증대, 선불전화기 확대, 그리고 제4 이동통신사 허가 등을 통해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고, 결합상품의 개발 등을 통하여 자유로운 서비스 경쟁 유도를 제시함

6. 개인정보 권리 강화

내 용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	반대	기타	반대	찬성	입 장 없 음
개인 동의 없이 비식별조치 처리 사용	반대	기타	반대	찬성	
개인정보 유상판매 시 동의 의무화	반대	기타	찬성	찬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강화	찬성	찬성	찬성	기타	
주민등록번호의 자유로운 변경 허용	기타	반대	찬성	기타	
주민등록번호를 임의의 일련번호로 체계변경	기타	찬성	찬성	찬성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목적별 번호사용	기타	찬성	찬성	찬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과 민간영역의 마케팅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집적, 공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개인을 특정 하는 주민등록번호와 인터넷·휴대폰·게임실명제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열악한 제도적·사회적 환경에 처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은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비식별 조치를 이유로 개인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을 허용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후보에 따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 권리강화에 대한 시각차가 뚜렷했다.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개인정보 권리강화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유승민 후보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개인정보 규제완화에 반대하면서도,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모든 질문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개인정보 규제완화 반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약화시키는 비식별조치 반대, 개인정보 유상판매 시 동의의무화, 주민등록번호의 자유로운 변경허용과 임의의 일련번호로의 변경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권리 보장에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신용정보업체 및 이동통신사 등 민간에서의 주민번호 수집 금지와 본인확인정보 폐기 입장을 표명한 것은 긍정적이거나, 주민번호 체계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은 큰 문제로 보인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유출된 주민번호의 자유로운 변경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은 환영할만하나, 빅데이터 산업과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유승민 후보는 주민번호 체제 개편에는 일정하게 찬성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개인정보 보호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여 우려된다.

1)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

-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이유로 개인정보 법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유승민 후보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나치게 엄격한 개인정보 법률을 완화해야 한다고 답변함
- 문재인 후보는 민간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고, 신용정보 업체와 이동통신사가 본인확인 명목으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안철수 후보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활용과 제공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완벽한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해야 한다는 모호한 입장을 보임

②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에 반대함. 반대로 유승민 후보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완화해야 하기 때문에 비식별화된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수집, 이용, 판매할 수 있어야 된다는 입장임
- 안철수 후보는 현재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익명처리 상태에서 활용가능하다는 입장인면서도, 질의에 대해 ‘찬성’이 아닌 ‘기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세부적인 측면에서 다른 입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함

- 유승민 후보는 ‘비식별화된 정보가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심의기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는 현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보이며, 비식별화된 정보가 재식별 되었을 때 이용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기업들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에 대해 답해야할 것임

③ 개인정보 유상판매

- 개인정보를 판매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 심상정, 유승민 후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찬성함. 반면 문재인 후보는 반대, 안철수 후보는 시간을 두고 검토할 사안이라며 입장을 유보했음
- 문재인 후보는 반대 입장을 표하였는데, 동의를 하더라도 판매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반대한다는 것인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법 개정이 어떠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

2) 독립된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은 행정자치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이양 등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즉각적인 공약 이행이 필요함
-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모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민간, 공공부문을 통합한 실질적인 감독기구로서 역할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함
- 유승민 후보는 개인정보 감독기능을 행정자치부에 두는 것은 반대하나, ‘과학기술, ICT를 총괄하는 거버넌스 조직의 신설한 후 이 기구 산하에 관련 조직을 둘 것을 제안’하고 있음. 이는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소비자, 이용자의 권리 차원에서는 매우 우려스러움

3)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혁

- 주민등록번호 체제 변경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임. 심상정 후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같은 주민등록번호의 자유로운 변경허용, 임의의 일련번호 체계변경, 법령에 따른 수집 최소

화 및 목적별 번호 사용에 모두 찬성해 가장 주민등록번호 체제 변경에 적극적임

-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자유로운 변경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적극적 찬성을, 안철수 후보는 반대를, 문재인, 유승민 후보는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함. 주민등록번호 체제를 임의의 일련번호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는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후보는 찬성을, 문재인 후보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극적인 입장임.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및 목적별 번호사용은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후보는 찬성한 반면 문재인 후보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문재인 후보는 주민등록번호의 자유로운 변경허용, 임의의 일련번호 체계변경, 법령에 따른 수집 최소화 및 목적별 번호 사용 등 모든 질문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이는 주민번호의 문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불거진 문제이며 국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핵심적인 이슈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입장이 없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라고 볼 수 있음. 문재인 후보는 차기 정부에서 주민번호 체제를 어떻게 개선하고자 하는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할 것임
- 안철수 후보는 임의의 일련번호 체계 변경, 법령에 따른 수집 최소화 및 목적별 번호 사용은 찬성했으나, 유출된 주민번호의 자유로운 변경은 반대하고 있어 다소 일관성이 없는 답변을 보내옴. 안철수 후보는 변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변경을 허용하되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모호함
- 유승민 후보 역시 임의의 일련번호 체계변경, 법령에 따른 수집 최소화 및 목적별 번호 사용에는 찬성하였으나,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자유로운 변경이 아닌 '일시적 변경'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임

※ 개인정보 권리강화를 위한 후보별 정책

- 문재인 후보는 인터넷 서비스 등에서 민간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원칙적으로 금지, 신용정보업체와 이동통신사가 본인확인 명목의 예외적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 중지, 위협적으로 구축된 본인확인정보 폐기, 정보통신 분야 소비자들의 동의권 등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관련 법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및 권한 확장으로 민간 부문 개인정보 보호 감독을 제시함
- 안철수 후보는 빅데이터 활용은 재식별이 가능한 비식별화 정보가 아니라, 익명화된 정보의 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빅데이터 산업 진흥정책과 균형을 맞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수립, 집행

하고 그 활용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법령을 정비할 것을 제시함

- 심상정 후보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상업적 활용을 방지하는 개인정보보호 규범 재정립,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폐지 및 정보주체 동의 없는 비식별정보 활용 금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관한 집단소송제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대폭 강화 등을 제시함
- 유승민 후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주민등록번호 일시적 변경 허용, 개인 확인 방법의 다양화를 제시함